

노동정책연구  
2012. 제12권 제1호 pp.29-56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구 : 임금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반정호\*

본 논문은 1990~2010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가구 간의 소득격차와 빈곤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은 외환위기 전후를 기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약화되었으며, 특히 저학력-중고령 계층에서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개인 및 가구경제적 특성, 노동시장적 특성을 고려한 실증모형으로 소득격차와 빈곤가능성을 추정한 결과, 자영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격차와 빈곤위험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인구고령화와 노동유연성 확대에 따른 자영업 선택이 증가하는 현실과 경기침체 및 경쟁과열에 의한 자영업의 수익성 악화 현상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자영업의 저숙련화-중고령화-빈곤화 연결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는 고용 및 사회정책이 요구된다.

핵심 용어 :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소득격차, 빈곤위험

## I. 서론

우리나라의 대다수 (영세)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내수위축 탓에 고사 위기에 처해 있고,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자들이 대

논문접수일: 2012년 2월 21일, 심사의뢰일: 2012년 2월 22일, 심사완료일: 2012년 3월 5일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거 생계형 창업에 나서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일보와 한국자영업자총협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2011년 11월 전국자영업자 8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44.3%가 월평균 순이익이 2011년 기준 최저생계비인 144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올린다고 응답했다. 매달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응답도 16.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일보, 2011. 12. 5.자 보도).

전술한 자영업 노동시장의 경쟁 심화는 자영업자의 일자리 감소 및 빈번한 창업과 폐업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외환위기 시점이었던 1998년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08천개, 285천개씩 감소했다. 위기 이후 임금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선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2003년 신용대란 시기에 147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이후 2004년과 2005년 소폭의 증가를 제외하면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자영업 일자리는 감소하였다. 특히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과 2010년 각각 259천개, 119천개의 자영업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반정호, 2011).

그러나 최근 들어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던 자영업자 수는 2011년 8월 증가세로 돌아섰고 최근 3개월 동안 5만~10만 명씩 연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의 주요한 특징은 50대 이상 고령층이 창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2011년 3월 이후 매달 10만~20만 명씩 급증하여 이미 30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그러나 주지할 사실은 2010년과 2011년 상반기 폐업한 자영업자는 각각 118천 명, 7만7천 명 수준에 달해 창업보다 폐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세청(2010)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3년 내 폐업률이 10.4%를 기록하고 있어 자영업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짐작케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아 노동시장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중요한 부문임에는 틀림이 없다.<sup>1)</sup> 그러나 최근으로

1)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의 규모는 2010년 기준 5,592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5%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08년 기준 31.3%로 터키(39.0%), 그리스(35.1%), 멕시코(33.9%), 브라질(31.9%)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국가에 해당하며, OECD 회원국(15.8%), EU 27개국(16.5%)의 평균보다 높다(박희석, 2011).

오면서 경기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과 손쉬운 자영 창업은 자영업 부분의 경쟁 과열과 영업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이어져 국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소상공인진흥원(2010)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의 80.2%가 생계유지형 자영업자로 창업 준비 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수익성이 낮아 전문성을 갖춘 대형업체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특징을 지닌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영업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실업의 대안적 고용형태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중심의 탈산업화 진전과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의 내부적 이질성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세한 사업구조와 수익성 및 소득변동성 심화 요인 등으로 말미암아 자영업 노동시장의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주를 이룬다(성지미, 2011).<sup>2)</sup> 결과적으로 자영업 노동시장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변화는 자영자 개인과 이들 가구의 경제적 안녕(economic well-being)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를 대상<sup>3)</sup>으로 소득격차와 빈곤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영자 소득창출력이 실제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약화되고 있는지, (근로)소득격차 및 자영자 가구의 빈곤 동학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2인 이상 도시가구로 한정하였다.

2) Evans and Leighton(1989)은 임금근로와 비교한 자영업 경험으로부터의 수익(return)이 낮지만, 임금근로 경험을 쌓다가 나이 들어 자영업을 시작하면 소득이 낮을 확률이 높고, 절반 정도가 6년 이내에 퇴장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성지미, 2011).

3) 이 글에서 자영자 가구라 함은 가구의 사실상 생계유지에 책임을 지고 비용을 조달하는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무급가족종사자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 II. 선행연구 고찰

자영업자 혹은 자영자 가구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영자 선택(결정)과 직업만족도에 대한 연구들(Evans & Leighton, 1989; Evans & Jovanovic, 1989; Holtz-Eakin, Joulfaian, Rosen, 1994; Blanchflower & Oswald, 1998, Van Praag & Cramer, 2001; 김우영, 2000; 금재호·조준모, 2000; 김우영·김응규, 2001; 성지미, 2002)이 대부분이다.

이병훈·신재열(2011)은 기존의 자영업 선택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취업 동기에 대해 크게 ‘떠밀림’ 이론(push theory)와 ‘당김’ 이론(pull theory)으로 요약하고 있다. push 이론에 따르면, 임금노동자가 될 만한 숙련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시장 열위자들이 경기불황이나 소수자로서의 구조적 제약하에서 실업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영자로 ‘떠밀려’ 취업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반면, pull 이론에서는 고학력 전문성을 갖추거나 기업가적인 자질과 능력을 보유한 상위자들이 자영업의 이점인 자율성, 사업 개척의 모험심 발휘 및 성취감 추구, 고소득 기회, 가족부양을 위한 근로유연성 확보 및 피고용에 따른 관료적 통제 회피 등을 추구하여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논증하고 있다(이병훈·신재열, 2011). 즉 노동시장에서 자영업 일자리의 진입 배경에는 개인이 갖는 일에 대한 다양한 동기나 학력, 인적자본 등의 수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이질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자영업 성과를 다룬 연구는 자영업 소득, 지속기간, 만족도의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 소득의 결정요인 및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금근로와 비교하면 자영업에서 소득편차가 더 크고 소득불평등도가 높으며,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변동이 저소득 임금근로자보다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er, 1997a; Holz-Eakin, Rosen & Weathers, 2000; 성지미, 2011에서 재인용).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를 분석한 Hamilton (2000)의 연구는 두 집단의 소득격차를 설명하는 ① 투자-대리인 모형(Lazear

& Moor, 1984), ② Matching and Learning 모형(Javanovic, 1982), ③ 부문별 근로조건 차이 모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에게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소유권(ownership)과 주인 의식이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비금전적 보상이 주어져 직무만족이 높아지지만, 중위소득 기준 임금근로자의 초기소득이 자영업자보다 높고 소득증가율이 빠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 정도 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비교하면 자영자는 만일 임금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었던 소득보다 약 35%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기간과 상관없이 자영업자들의 중위소득 수준은 임금근로를 했을 경우보다 항상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금재호 외, 2003).

최근 자영자 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rostat(2005), HRSDC(2006)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독립소득자 가구(외벌이가구), 자녀 수가 많은 가구, 불충분한 근로시간을 갖는 일자리, 자영자 가구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자의 저숙련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자영자 가구의 (근로)빈곤화 문제는 낮은 소득과 변동이 심한 임금(근로소득)으로 인한 요인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가지며(Crettaz & Bonoli, 2010),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비공식 고용(informal employment)은 낮은 생산활동, 불충분한 경제적 이동의 기회, 사회적 보호정책에 대한 사각지대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OECD, 2009).<sup>4)</sup> 과거 공식 고용(임금근로자)보다 비공식 고용의 참여를 통해 조세 및 규제회피 전략으로 선택되거나 낮은 질의 사회보험 및 공공서비스 급여가 임금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낮추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경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Perry et al., 2007; Malo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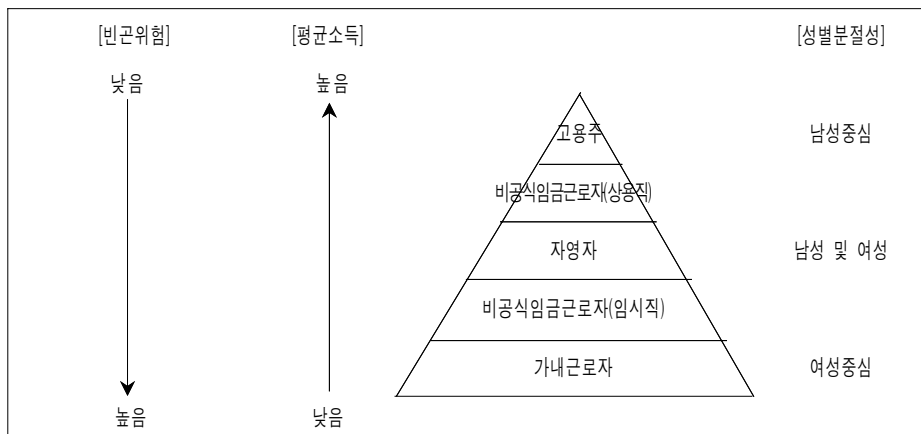
4) 국내에서 윤희숙(2012)은 『한국노동패널』 3~11차 조사를 이용하여 빈곤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빈곤에 빠질 확률이 비임금근로와 미취업자에 비해 낮으며, 자영자의 경우 사업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임금근로(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47.4%는 항상빈곤(3회 이상 빈곤경험)이나 장기빈곤 상태에 처해 있으며, 빈곤탈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경수(2010)와 이병희(2012)에서도 자영자 가구의 소득부진 현상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자영자 가구의 비중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서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4; Jutting, Parlevliet & Xenogianni, 2008).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개발국가들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와 사업체 분포에 있어서 매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의 지출 감소와 민영화, 경기침체 등의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대규모 기업체, 국가 운영 공기업이 감소했고 따라서 노동력의 기술수준도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저개발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저임노동 확산과 경기침체로 인해, 그리고 1970년대 고실업 대비 및 1990년대 빈곤감소 전략의 일환으로 소규모 기업체 창업을 돕는 자영업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동시장 내 자영업 일자리 확장과 숙련수준의 평준화 정책은 평균임금의 감소로 나타났고 저임금노동으로 수렴되는 패턴을 낳게 되었다(Robson, 1997; Taiwo, 2011). Robson(1997)은 실증분석을 통해 영국의 자영자 가구의 상대소득(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자 가구의 소득비율)이 1979년 1.85에서 1991년 1.4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으로 대표되는 비공식 고용의 확장과 내부 구성의 이질성 극대화는 빈곤위험에의 노출, 소득확보의 비규칙성, 고용의 불안정성 등으로 말미암아 친빈곤적 성장(pro-poor growth)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림 1]에서는 자영업을 포함한 비공식 고용의 성별, 평균소득, 빈곤위험의 분절성을 도식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1) 비공식 고용(자영업)의 분절성(성, 소득, 빈곤위험)



자료: Chen et al.(2005)에서 인용.

기존 연구는 자영자(가구)의 경제적 복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저숙련-저소득(영세성) 관계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켰다(Lofstrom, 2009; 이승렬 외, 2009).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그간 과포화 상태의 자영자 구조조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자영업시장에서 빠져나가 임금근로자로 흡수되기보다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어 곧바로 빈곤화되는 현상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sup>5)</sup>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경쟁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을 느낀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 창업으로 이어지는 자영업의 중고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침체, 영업이익 감소로 사업실패 및 빈곤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창업이 손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영 창업에 일정한 숙련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 임금근로자에 비해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 등은 자영자의 저숙련-저소득-고령화 연결고리를 쉽게 끊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반정호, 2011). 관련하여 베이비붐 세대(1955~1963생)의 정년퇴직과 자영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들의 정년퇴직은 소비, 저축, 부동산, 가족관계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이들의 고용불안과 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금재호, 2011).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격차)과 빈곤실태를 임금근로자 가구와 비교하고, 실제로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 약화 경향과 빈곤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5) 이병희(2012)는 비임금 일자리를 이탈한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로 전환하는 비중은 분석 기간(2000~2008년) 동안 매년 4~5%에 불과한 반면, 비취업상태로 전환하는 비중은 5~8%에 이른다고 지적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더라도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 Ⅲ. 분석 결과

#### 1.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실태

여기에서는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의 실질 경상소득 및 가구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분석 기간 동안의 소득변동 추이와 절대적·상대적 빈곤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sup>6)</sup> 절대빈곤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구 비율로 정의되며,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 비율을 의미한다.

<표 1>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도시 2인 이상)의 실질 경상소득 및 구성비 추이를 제시해 주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실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이전까지는 자영자 가구의 경상소득 및 가구주 본인의 근로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소득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소득창출력 또한 낮아진다는 것이다. 자영자 가구의 경상소득은 1990년 246천 원 수준에서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010년 2,312천 원까지 상승한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는 같은 기간 237천 원에서 11.8% 증가한 2,470천 원까지 증가했다. 노동시장을 통해 얻는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는 자영자가 10.3% 증가한 데 비해 임금근로자 가구는 분석 기간 동안 11.4%로 1.1%포인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두 가구의 소득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자영자 가구의 본인 근로+사업소득의 구성 비중은 1990년 84.8%에서 2001년 76.7%까지 하락했고,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되어 2010년 기준 70.7%까지 낮아져 분석 기간 동안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노동소득 구성비는 무려 14.1%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구주 노동소득의 구성비 감소는 배우자를 비롯한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 의존도를 높이는 동

6) 경상소득은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사 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2005년 소비자물가로 조정한 실질 금액이다. 빈곤율 지표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시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다.



〈표 1〉 자영자 가구의 실질 경상소득 및 구성비 추이(1990~2010)

(단위: 천원, %)

		1990	1993	1996	1998	2001	2003	2005	2008	2010	증가율
자 영 자 가 구	경상소득	246 (100)	465 (100)	785 (100)	816 (100)	1,060 (100)	1,292 (100)	1,504 (100)	1,921 (100)	2,312 (100)	11.3
	가구주 노동소득	208 (84.8)	391 (83.9)	642 (81.8)	655 (80.4)	812 (76.7)	980 (75.8)	1,102 (73.3)	1,353 (70.4)	1,635 (70.7)	10.3
	가구원 노동소득	30 (12.3)	65 (13.9)	120 (15.2)	132 (16.2)	208 (19.6)	272 (21.0)	330 (21.9)	475 (24.7)	574 (24.8)	15.1
	재산소득	2 (0.7)	3 (0.6)	7 (0.9)	7 (0.9)	7 (0.7)	5 (0.4)	5 (0.3)	8 (0.4)	5 (0.2)	5.1
	공적 이전소득	1 (0.4)	1 (0.3)	4 (0.5)	3 (0.4)	9 (0.9)	12 (0.9)	22 (1.4)	36 (1.9)	46 (2.0)	20.1
	사적 이전소득	5 (1.9)	6 (1.2)	12 (1.6)	17 (2.1)	23 (2.2)	23 (1.8)	45 (3.0)	49 (2.5)	53 (2.3)	12.2
임 금 근 로 자 가 구	경상소득	237 (100)	457 (100)	790 (100)	878 (100)	1,188 (100)	1,428 (100)	1,705 (100)	2,242 (100)	2,470 (100)	11.8
	가구주 노동소득	186 (78.8)	354 (77.6)	588 (74.5)	664 (75.6)	882 (74.3)	1,065 (74.6)	1,237 (72.6)	1,634 (72.9)	1,783 (72.2)	11.4
	가구원 노동소득	39 (16.6)	84 (18.5)	168 (21.3)	176 (20.0)	252 (21.2)	311 (21.8)	380 (22.3)	491 (21.9)	547 (22.2)	13.4
	재산소득	2 (1.0)	5 (1.0)	7 (0.9)	11 (1.2)	11 (0.9)	5 (0.4)	7 (0.4)	7 (0.3)	8 (0.3)	5.7
	공적 이전소득	1 (0.6)	3 (0.6)	6 (0.8)	5 (0.6)	12 (1.0)	14 (0.9)	25 (1.5)	43 (1.9)	60 (2.4)	19.3
	사적 이전소득	7 (3.0)	11 (2.3)	20 (2.5)	23 (2.6)	30 (2.6)	34 (2.3)	56 (3.3)	66 (2.9)	71 (2.9)	11.7

주: 1) 경상소득 금액은 해당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공근으로 나눈 균등화소득임.

2) 증가율은 1990~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임.

3) ( )는 구성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시에 공·사 이전소득의 구성비 증가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노동소득은 1990년 78.8%에서 2001년 74.3%, 2010년 72.2%까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분석 기간 동안 6.6%포인트 하락에 그쳐 임금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노동소득 구성비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2>에서는 자영자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절대빈곤율 추이를 임금근로자 가구와 비교하고 있다. 1996년 기준 자영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미만 절대빈곤

율은 2.5%로 임금근로자 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시점부터는 자영자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3년 신용대란 시기에 자영자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5.1%까지 높아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도 4.9%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절대빈곤율 3.8%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2010년에는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낮은 3.8%의 빈곤율을 기록하였다.

최저생계비를 겨우 벗어나거나(최저생계비 120% 미만 차상위계층) 절대빈곤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최저생계비 150% 미만 차차상위계층) 자영자의 비중은 1996년 9.0%로 임금근로자(8.4%)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에 이 비중은 자영자 가구에서 18.1% 증가한 반면, 임금근로자 가구는 14.2%로 비중의 차이가 크게 확대되었고, 외환위기를 벗어난 2001년에도 이들 소득계층 비중은 자영자 13.8%, 임금근로자 10.8%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최저생계비 100~150% 미만 저소득계층은 자영자 가구에서 11.4%로 추세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임금근로자의 5.4%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비중으로 자영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자영자 가구의 절대빈곤율 추이와 변화(시장소득 기준)

(단위: %)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100% 미만	120% 미만	150% 미만	200% 미만	200% 이상	100% 미만	120% 미만	150% 미만	200% 미만	200% 이상
1996	2.5	3.3	5.7	16.7	71.8	2.5	2.3	6.1	16.2	73.0
1998	5.9	5.9	12.2	23.2	52.9	5.5	4.7	9.5	18.6	61.8
2001	3.9	4.9	8.9	20.3	62.0	3.5	3.5	7.3	17.4	68.3
2003	2.9	2.4	7.3	18.6	68.8	2.7	2.1	4.9	10.9	79.4
2005	5.1	3.8	6.8	16.8	67.5	3.5	1.9	4.3	10.7	79.6
2008	4.9	3.8	7.6	18.9	64.8	3.8	1.5	3.9	9.5	81.5
2010	3.8	3.4	5.6	15.9	71.3	4.8	3.4	4.9	13.4	73.6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3>에서는 상대빈곤율, 빈곤가구 구성비 및 발생비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990년 7.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0년 기준 14.9%로 1990년에 비해 빈곤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전체 빈곤가구의 구성은 임금근로자 가구 53.4%로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임금근로자로 채워져 있었고, 자영자 가구는 22.7%에 불과했다. 외환위기인 1998년에도 임금근로자 가구와 자영자 가구의 구성 비중은 각각 35.6%, 19.5%로 하락했고, 대신 무직자 가구의 빈곤 구성이 44.9%까지 크게 증가해 점차적으로 고용과 빈곤의 관계가 긴요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분석 기간 동안 발견되는 주요한 특징은 임금근로자 가구의 빈곤 구성이 점차 감소(53.4 → 38.7%)한 반면, 무직자 가구의 빈곤 구성은 외환위기 이후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0년을 제외하면 자영자 가구의 빈곤 구성 비중은 20%대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영자 가구의 빈곤발생비를 살펴보면, 역시 201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자영자 가구의 상대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임금근로자의 빈곤발생비 증가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자영자 가구의 상대빈곤율 추이와 변화

(단위 : %)

	전 체	구성비			발생비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무직자 가구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1990	7.8	22.7	53.4	23.9	6.3	6.2
1993	8.2	24.4	45.5	30.1	6.5	5.8
1996	8.2	28.7	43.2	28.1	7.5	5.7
1998	11.4	19.5	35.6	44.9	7.2	6.9
2001	11.3	19.8	33.9	46.3	7.0	6.7
2003	13.1	18.1	40.3	41.7	7.3	8.1
2005	13.6	22.7	39.1	38.2	10.5	8.8
2008	14.7	20.9	36.0	43.1	11.7	8.5
2010	14.9	13.2	38.7	48.1	8.4	9.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 2. 자영자 가구의 저학력-고령화와 빈곤위험

앞선 분석에서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과 함께 빈곤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영업의 저숙련-고령화 현상과 그에 따른 빈곤취약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에서는 빈곤가구의 가구주 학력·연령별 구성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1990년 빈곤 자영자 가구에서 초졸 및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6%, 22.8%에서 2010년 21.0%, 20.9%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여 년 동안 저학력자의 빈곤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초졸의 경우 38.0%에서 16.9%로 무려 2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졸 이하 학력층에서도 26.8%에서 14.8%포인트 감소한 12.0%로 자영자 가구 내 저학력 빈곤층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 빈곤 구성을 살펴보면, 자영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에서 고연령층에서의 빈곤 구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자영자 가구에서 더 두드러진다. 1990년 빈곤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표 4> 빈곤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학력·연령별 구성 변화

(단위: %)

		자영자 가구			임금근로자 가구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학 력	초졸 이하	23.6	14.2	21.0	38.0	16.2	16.9
	중졸 이하	22.8	18.7	20.9	26.8	24.5	12.0
	고졸 이하	47.7	55.0	39.2	32.7	45.0	53.4
	초대졸 이하	0.5	6.1	7.7	1.2	6.5	7.5
	대학이상	5.4	6.1	11.3	1.4	7.9	10.2
연 령	30세 미만	6.2	5.1	0.0	17.5	10.2	3.7
	30~44세	64.7	58.3	27.3	58.2	54.1	42.7
	45~64세	25.6	32.0	50.7	23.3	30.8	36.9
	65세 이상	3.5	4.5	22.1	1.0	4.9	16.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30~44세에서 64.7%로 가장 높았고 45~64세(25.6%), 30세 미만(6.2%)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영자 가구 내 30~44세 핵심 연령층의 빈곤 구성은 2000년 58%에서 2010년 27.3%까지 하락한 반면 45~64세 중고령층의 빈곤 구성은 같은 기간 각각 32%, 50.7%로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201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 구성이 22.1%로 10년 사이(2000년 4.5%)에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에서도 중고령층 및 고령층의 빈곤심화 양상은 자영자 가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자영자 가구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의 변화와 격차를 고령층 및 저학력층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비교해 보도록 한다. <표 5>에서는 소득분위별(가처분소득 기준)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주요 시기별 소득격차를 제시하고 있다.<sup>7)</sup> 1990년 자영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막론하고 모든 소득계층에서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나 2000년에는 하위 10% 극빈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추월당했으며, 2010년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해 앞서 언급했던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 약화가 특정 소득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저숙련 자영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1990년 기준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21.9%(74천 원) 높은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소득격차도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졌다. 2000년과 2010년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향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1990년에 비해 각 소득계층별 격차는 대폭 완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중고령층(45~64세)의 경우도 1990년 자영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를 상회하고 있었으나 2000년과 2010년에 들어서는 일부 저소득 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에서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낮아진다.

<표 6>에서는 빈곤심도(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의 곱)를 나타내는  $FGT(\alpha=1)$  지수 요인분해(decomposition)를 통해 자영자 가구의 학력수준 및 연령별 빈곤기

7)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 없이 발생하는 의무적 지출과 가구 간 및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표 5〉 소득분위별 소득격차와 변화(가처분소득 기준)

(단위: 천 원, %)

전 체		평균	백분위수				
			10	25	50	75	90
1990	임금근로자 가구	434	228	301	394	520	676
	자영자 가구	466	234	311	422	555	758
	차이(₩)	32	6	10	29	35	82
	차이(%)	7.4	2.6	3.2	7.3	6.7	12.2
2000	임금근로자 가구	1,110	553	751	1,007	1,363	1,801
	자영자 가구	1,064	564	721	951	1,301	1,683
	차이(₩)	-46	11	-29	-57	-62	-118
	차이(%)	-4.3	1.9	-4.1	-5.9	-4.8	-7.0
2010	임금근로자 가구	1,911	896	1,257	1,741	2,371	3,126
	자영자 가구	1,843	889	1,241	1,651	2,261	3,044
	차이(₩)	-67	-7	-16	-90	-110	-82
	차이(%)	-3.5	-0.7	-1.3	-5.2	-4.6	-2.6
저학력층		평균	백분위수				
			10	25	50	75	90
1990	임금근로자 가구	336	176	231	315	413	521
	자영자 가구	410	182	289	389	520	646
	차이(₩)	74	6	58	75	107	125
	차이(%)	21.9	3.6	25.3	23.7	25.9	24.1
2000	임금근로자 가구	904	489	617	810	1,134	1,435
	자영자 가구	980	487	671	872	1,159	1,561
	차이(₩)	76	-2	55	62	25	126
	차이(%)	8.4	-0.3	8.9	7.7	2.2	8.8
2010	임금근로자 가구	1,284	563	761	1,173	1,635	2,233
	자영자 가구	1,416	519	866	1,370	1,815	2,506
	차이(₩)	132	-45	105	197	181	273
	차이(%)	10.3	-7.9	13.8	16.8	11.0	12.2
중고령층		평균	백분위수				
			10	25	50	75	90
1990	임금근로자 가구	488	241	324	437	596	792
	자영자 가구	510	260	343	450	638	826
	차이(₩)	21	19	19	13	42	34
	차이(%)	4.4	7.8	5.9	2.9	7.1	4.3
2000	임금근로자 가구	1,217	578	782	1,102	1,546	1,984
	자영자 가구	1,134	594	777	1,035	1,387	1,787
	차이(₩)	-84	16	-4	-68	-159	-197
	차이(%)	-6.9	2.7	-0.6	-6.1	-10.3	-9.9
2010	임금근로자 가구	2,049	942	1,325	1,860	2,552	3,420
	자영자 가구	2,007	983	1,363	1,815	2,506	3,260
	차이(₩)	-42	41	38	-45	-45	-161
	차이(%)	-2.1	4.4	2.9	-2.4	-1.8	-4.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여도를 분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GT지수는 Foster, Greer, and Thorbecke (1981)에 의해 고안된 빈곤지표로서 빈곤층의 규모(extent)와 빈곤심도(depth)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8)</sup> FGT 지표의 하위집단별 요인분해는  $\hat{P}(z; \alpha) = \sum_{g=1}^G \hat{\phi}(g) \hat{P}(z; \alpha; g)$ 으로 정의되며, 하위집단의 구성 비중과 집단별 빈곤심도를 고려하여 전체 빈곤심도(FGT,  $\alpha=1$ )에 대한 절대적·상대적 기여도를 분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G$ 는 하위집단의 수,  $\hat{P}(z; \alpha; g)$ 는 하위집단  $g$ 의 FGT지수,  $\hat{\phi}(g)$ 는 집단  $g$ 의 비중,  $\hat{\phi}(g) \hat{P}(z; \alpha; g)$ 는 전체 빈곤에 대한 집단  $g$ 의 절대적 기여도를 의미한다. 또한 전체 빈곤심도에 대한 개별 집단의 상대적 기여도는  $[\hat{\phi}(g) \hat{P}(z; \alpha; g)] / \hat{P}(z; \alpha)$ 로 나타낼 수 있다.

1990년 초졸 이하 저숙련 자영자 가구의 빈곤심도는 0.0519로 초졸 이하 임금근로자 가구의 빈곤심도 0.0357보다 높고, 중졸 이하 학력계층에서도 자영자 가구의 빈곤심도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다. 2000년과 2010년의 경우에는 중졸 이하 학력계층에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자 가구의 빈곤심도가 낮아지지만 여전히 초졸 이하 저학력계층에서는 자영자 가구의 빈곤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학력집단별 빈곤심도와 구성 비중을 고려하여 전체 빈곤심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해하면, 초졸 이하 자영자의 상대적 기여도는 1990년 10.7%에서 2000년 6.7%로 감소하지만 2010년 다시 8.4%까지 높아지고 있다. 임금근로자 가구의 기여도는 1990년 18.9% 수준에서 2010년 16.2%로 낮아졌으나 자영자 가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자영자 가구의 저학력층 비중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것을 감안하면 저학력층 자영자의 빈곤심도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8) FGT지수는  $\frac{1}{n} \sum_{i=1}^q \left[ \frac{z - y_i}{z} \right]^\alpha$ 로 정의되며, 다른 빈곤지표와는 달리 파라미터  $\alpha$ 의 값에 따라 다소 상이한 기능을 하는데 파라미터  $\alpha$ 는 빈곤에 대한 혐오감(aversion)을 나타내 주는 파라미터로서  $\alpha$ 값이 커질수록 이 지수는 빈곤에 대해 민감해짐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n$ 은 전체 인구(또는 가구) 수,  $q$ 는 빈곤선 이하의 개인(또는 가구) 수,  $z$ 는 빈곤선,  $y_i$ 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  $i$ 의 소득,  $\alpha$ 는 빈곤혐오감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alpha$ 가 0인 경우 빈곤율(빈곤규모)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며,  $\alpha$ 가 1인 경우 빈곤심도(빈곤율과 빈곤집 비율의 곱),  $\alpha$ 가 2인 경우 센지수와 유사한 일종의 불평등지표가 된다(여유진 외, 2005).

〈표 6〉 자영자 가구의 학력별 빈곤심도(FGT,  $\alpha=1$ ) 요인분해

		빈곤심도 (FGT, $\alpha=1$ )	구성 비중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1990	임금근로자 가구	초졸 이하	0.0357	0.087	0.0031	0.189
		중졸 이하	0.0234	0.132	0.0031	0.188
		고졸 이하	0.0112	0.339	0.0038	0.231
		전문대졸 이상	0.0025	0.153	0.0004	0.024
	자영자 가구	초졸 이하	0.0519	0.034	0.0018	0.107
		중졸 이하	0.0191	0.060	0.0011	0.070
		고졸 이하	0.0188	0.148	0.0028	0.169
		전문대졸 이상	0.0079	0.047	0.0004	0.023
	전 체		0.0164	1.000	0.0164	1.000
	2000	임금근로자 가구	초졸 이하	0.0278	0.072	0.0020
중졸 이하			0.0347	0.079	0.0028	0.180
고졸 이하			0.0149	0.302	0.0045	0.293
전문대졸 이상			0.0058	0.215	0.0013	0.081
자영자 가구		초졸 이하	0.0311	0.033	0.0010	0.067
		중졸 이하	0.0148	0.052	0.0008	0.050
		고졸 이하	0.0143	0.174	0.0025	0.161
		전문대졸 이상	0.0079	0.074	0.0006	0.038
전 체		0.0154	1.000	0.0154	1.000	
2010		임금근로자 가구	초졸 이하	0.0821	0.054	0.0044
	중졸 이하		0.0480	0.067	0.0032	0.118
	고졸 이하		0.0293	0.291	0.0085	0.314
	전문대졸 이상		0.0113	0.325	0.0037	0.135
	자영자 가구	초졸 이하	0.0965	0.024	0.0023	0.084
		중졸 이하	0.0411	0.036	0.0015	0.054
		고졸 이하	0.0190	0.131	0.0025	0.092
		전문대졸 이상	0.0148	0.073	0.0011	0.040
	전 체		0.0271	1.000	0.0271	1.000

주: FGT 지수 산출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7〉은 동일한 방식으로 연령계층별 빈곤심도를 분해한 것이다. 학력별 빈곤심도는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심도가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의 경우, 비노인 임금근로자 가구의 빈곤심도는 0.0235, 중고령자 가구는 0.0225, 고령자 가구는 0.101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자영자 가구에서는 비노인 가구 0.0156, 중고령자 0.0247, 고령자 가구는 0.0979 수준으로 고령자 가구에서 빈곤이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자영자 가구의 연령별 빈곤심도(FGT,  $\alpha=1$ ) 요인분해

			빈곤심도 (FGT, $\alpha=1$ )	구성 비중	절대적 기여도	상대적 기여도
1990	임금근로자 가구	비노인(45세 미만)	0.0146	0.565	0.0082	0.502
		중고령자(45~64세)	0.0129	0.143	0.0018	0.112
		고령자(65세 이상)	0.0883	0.003	0.0003	0.017
	자영자 가구	비노인(45세 미만)	0.0220	0.201	0.0044	0.269
		중고령자(45~64세)	0.0158	0.084	0.0013	0.081
		고령자(65세 이상)	0.0821	0.004	0.0003	0.019
전 체			0.0164	1.000	0.0164	1.000
2000	임금근로자 가구	비노인(45세 미만)	0.0148	0.454	0.0067	0.436
		중고령자(45~64세)	0.0170	0.204	0.0035	0.225
		고령자(65세 이상)	0.0362	0.009	0.0003	0.022
	자영자 가구	비노인(45세 미만)	0.0153	0.185	0.0028	0.185
		중고령자(45~64세)	0.0131	0.139	0.0018	0.119
		고령자(65세 이상)	0.0237	0.008	0.0002	0.013
전 체			0.0154	1.000	0.0154	1.000
2010	임금근로자 가구	비노인(45세 미만)	0.0235	0.378	0.0089	0.327
		중고령자(45~64세)	0.0225	0.322	0.0072	0.267
		고령자(65세 이상)	0.1017	0.036	0.0037	0.136
	자영자 가구	비노인(45세 미만)	0.0156	0.087	0.0014	0.050
		중고령자(45~64세)	0.0247	0.154	0.0038	0.141
		고령자(65세 이상)	0.0979	0.022	0.0021	0.079
전 체			0.0271	1.000	0.0271	1.000

자료: <표 6>과 동일.

전체 빈곤심도에 대한 연령계층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영자 가구의 경우 비노인 가구의 상대적 기여도는 1990년 26.9%에서 2000년 18.5%로 낮아지고 2010년 기준 5.0%까지 낮아진다. 그러나 중고령자 가구에서는 같은 기간 8.1% → 11.9% → 14.1%까지 높아지고 있으며, 고령자 가구에서는 1990년 1.9%로 매우 낮은 기여도를 보였고, 2000년 1.3%까지 낮아지지만 2010년에 들어 7.9%까지 매우 높은 증가를 보인다. 분석 기간 중 중고령 및 고령 자영자의 비중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빈곤심도가 함께 증가하는 양상으로 인해 전체 분석대상 가구의 빈곤심도에 기여하는 수준 또한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45세 미만 비노인 자영자 가구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빈곤심도 역시 함께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상대적 기여도 수준은 1990년 26.9%에

서 2010년 5.0% 수준까지 크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임금노동시장에서의 조기은퇴 및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 창업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의 중고령화 현상이 해당 가구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임금근로자 가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 혹은 자영자 가구 내부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전된 고령화와 탈산업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되어 우리나라 전반에 노년기 빈곤취약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 3. 자영자·임금근로자 가구 간 소득격차 및 빈곤 결정요인

여기에서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자영자 가구의 소득격차가 최근으로 오면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빈곤위험에 대한 취약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회귀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회귀분석은 가구주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자영자 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 수준과 격차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과거에 비해 소득격차가 변화했는지를 추정한 것이다. 이 모형의 종속변수는 분석대상 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 특성(15세 미만 자녀 수, 65세 이상 노인 가구원 수, 취업 가구원 수), 가구주 직업, 자영자 여부, 비교대상 현재 시점의 연도더미(dummy variables), 연도더미와 자영자 여부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이다. 다음으로 자영자 가구의 빈곤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 여부(상대적 빈곤)를 종속변수로 하는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비교가 되는 두 시점의 자료를 연계(pooling)하여 추정하였다.

두 회귀모형에서 자영자 더미변수 계수의 크기와 방향은 임금근로자 가구와의 소득격차 및 빈곤 가능성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며, 교차항 변수의 유의도와 방향은 비교가 되는 두 시점 간 자영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와 빈곤 가능성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교차항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갖는다면 과거에 비해 비교 시점의 소득격차는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하는 한편 빈곤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의하게 양(+)<sup>1)</sup>의 값을 갖는다면 소득격차는 축소된 것을, 빈곤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소득격차와 빈곤 가능성은 시점의 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표 8>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단위 4시점으로 구분하여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을 회귀식으로 추정한 결과다. 각 시기별 회귀분석 결과는 설명변수의 계수 크기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방향은 모두 동일하므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가장 최근인 2005~2010년 자료의 분석

<표 8> 자영자-임금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 결정요인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	
	계수	오차	계수	오차	계수	오차	계수	오차
남성	0.525	(0.015)***	0.427	(0.020)***	0.393	(0.025)***	0.466	(0.024)***
30세 미만	-0.215	(0.014)***	-0.186	(0.021)***	-0.199	(0.035)***	-0.217	(0.040)***
45세 미만	0.090	(0.014)***	0.030	(0.020)	0.010	(0.025)	0.065	(0.022)**
65세 미만	-0.620	(0.097)***	-0.668	(0.063)***	-0.757	(0.063)***	-0.700	(0.052)***
초졸 이하	-0.640	(0.021)***	-0.366	(0.032)***	-0.443	(0.041)***	-0.465	(0.040)***
중졸	-0.466	(0.019)***	-0.296	(0.029)***	-0.430	(0.038)***	-0.450	(0.036)***
고졸	-0.296	(0.015)***	-0.128	(0.021)***	-0.199	(0.027)***	-0.241	(0.025)***
전문대졸	-0.199	(0.023)***	-0.110	(0.030)***	-0.096	(0.036)**	-0.090	(0.032)**
15세 미만 아동 수	0.051	(0.007)***	0.059	(0.010)***	0.058	(0.012)***	0.061	(0.011)***
65세 이상 노인 수	-0.132	(0.111)	-0.104	(0.033)**	-0.103	(0.027)***	-0.126	(0.024)***
취업가구원 수	0.020	(0.007)**	0.098	(0.010)***	0.160	(0.013)***	0.154	(0.012)***
관리전문직	0.465	(0.024)***	0.927	(0.032)***	1.076	(0.036)***	1.064	(0.032)***
사무직	0.422	(0.023)***	0.774	(0.029)***	0.988	(0.035)***	1.002	(0.032)***
서비스판매직	0.329	(0.019)***	0.606	(0.024)***	0.731	(0.032)***	0.670	(0.032)***
기능직	0.252	(0.018)***	0.531	(0.022)***	0.704	(0.028)***	0.735	(0.027)***
자영업터미	-1.423	(0.037)***	-1.764	(0.040)***	-2.652	(0.049)***	-2.672	(0.043)***
연도터미	0.637	(0.010)***	0.150	(0.015)***	0.216	(0.019)***	0.112	(0.017)***
교차항	-0.307	(0.048)***	-0.855	(0.056)***	-0.040	(0.065)	-0.109	(0.074)
상수	12.759	(0.027)***	12.959	(0.037)***	12.988	(0.045)***	13.149	(0.042)***
N	13,649		11,506		10,637		11,398	
F	851.72***		589.00***		624.07***		705.15***	
Adj R <sup>2</sup>	0.529		0.479		0.513		0.527	

주: 1) 기준변수는 30~44세, 대졸 이상, 단순노무직임.

2) #p<0.1, \*p<0.05, \*\*p<0.01, \*\*\*p<0.00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결과만을 언급하도록 한다. 자영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은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에 비해 46.6%의 높은 근로소득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44세 장년층에 비해 30세 미만의 청년층 소득은 감소(21.7%), 45~64세 중고령층은 6.5%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70.0%의 소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고학력 집단에 비해 저학력층으로 갈수록 근로소득은 체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구성과 관련하여 가구 내 15세 미만 요보호아동이 존재하는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6.1%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2.6%의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가구 내 취업가구원이 증가할수록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직업별 소득효과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직 대비 관리전문직(106%), 사무직(100%), 서비스판매직(67%), 기능직(74%) 모두에서 소득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자영자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를 설명해 주는 자영업더미 변수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 및 가구경제적 특성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했을 때 1990~1995년 기간에 142% 수준이던 근로소득 격차가 1995~2000년 기간에 176%, 2000~2005년 기간에 265%까지 확대되었고 2005~2010년 기간에 267%까지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자영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차항더미 변수의 추정 결과를 보면 네 시기 모두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가구의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1990~1995년, 2000~2005년에 개인과 가구 특성을 고려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득격차가 발생했던 것으로 실증되고 있다.

<표 9>는 동일한 방식으로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빈곤 결정요인과 그 가능성이 최근으로 올수록 어느 정도 확대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개인 및 가구경제적 특성, 노동시장 특성 변수의 계수 크기와 방향이 모든 분석 시점별로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서술하도록 한다.

<표 9> 자영자-임금근로자 가구의 빈곤 결정요인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	
	한계 효과	오차	한계 효과	오차	한계 효과	오차	한계 효과	오차
남성	-0.050	(0.035)***	-0.025	(0.037)***	-0.012	(0.035)*	-0.017	(0.034)**
30세 미만	0.047	(0.040)***	0.029	(0.048)***	0.025	(0.061)*	0.053	(0.071)***
45~64세	0.001	(0.040)	0.001	(0.043)	0.012	(0.041)#	0.017	(0.039)*
65세 이상	0.041	(0.171)	0.039	(0.087)**	0.060	(0.074)***	0.086	(0.067)***
초졸 이하	0.234	(0.059)***	0.174	(0.063)***	0.204	(0.060)***	0.247	(0.057)***
중졸	0.133	(0.056)***	0.126	(0.060)***	0.168	(0.058)***	0.182	(0.056)***
고졸	0.056	(0.049)***	0.053	(0.051)***	0.077	(0.048)***	0.091	(0.043)***
전문대졸	0.011	(0.083)	0.018	(0.080)***	0.037	(0.071)**	0.038	(0.063)**
15세 미만 아동 수	0.015	(0.020)***	0.013	(0.020)	0.016	(0.019)***	0.016	(0.019)***
65세 이상 노인 수	0.031	(0.178)	0.025	(0.057)**	0.035	(0.036)***	0.054	(0.033)***
취업가구원 수	-0.087	(0.025)***	-0.098	(0.026)***	-0.119	(0.024)***	-0.138	(0.022)***
관리전문직	-0.065	(0.078)***	-0.075	(0.085)***	-0.089	(0.064)***	-0.103	(0.055)***
사무직	-0.064	(0.081)***	-0.069	(0.071)***	-0.098	(0.072)***	-0.114	(0.064)***
서비스판매직	-0.046	(0.045)***	-0.047	(0.045)***	-0.048	(0.046)***	-0.050	(0.045)***
기능직	-0.059	(0.042)***	-0.065	(0.043)***	-0.077	(0.042)***	-0.096	(0.041)***
자영업더미	0.036	(0.046)***	0.032	(0.043)***	0.010	(0.057)	0.028	(0.045)**
연도더미	0.014	(0.032)**	-0.006	(0.035)	0.047	(0.034)***	0.030	(0.032)***
교차항	-0.003	(0.059)	-0.015	(0.068)#	0.009	(0.068)	-0.041	(0.067)
상수	-0.617	(0.065)***	-0.413	(0.068)***	-0.615	(0.066)***	-0.342	(0.061)***
N	19,871		16,986		15,751		16,753	
$\chi^2$	3198.26***		3385.29***		4034.82***		5551.34***	
Pseudo R <sup>2</sup>	0.223		0.260		0.291		0.343	

주· 자료: <표 8>과 동일.

분석대상 가구의 빈곤 가능성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1.7%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그리고 저학력층일수록 빈곤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수많은 빈곤 연구들에서 실증되었던 여성 및 낮은 인적자원을 보유한 계층의 빈곤취약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다. 가구경제적 특성별 빈곤 가능성을 살펴보면, 가구 내 15세 미만 및 65세 이상 노인의 요보호가구원이 존재할수록 빈곤 가능성은 각각 1.6%, 5.4%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 내 취업가구원 수의 증가는 가구 빈곤 가능성을 약 13.8%가량 낮추는 매우 높은 빈곤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변수의 계수 크기는 1990년대 초반 8.7%에서 2000년 시

기에 9.8%, 2005년 시점에 11.9%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가구의 고용상태와 해당 가구의 빈곤이 매우 긴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가구의 직업별 빈곤 효과는 안정된 직업을 가진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빈곤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임금근로자 가구 대비 자영자 가구의 빈곤효과는 약 3.0%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자영자의 빈곤노출 가능성이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0~2005년 시기를 제외한 모든 분석 시기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된 것이다. 연도더미 변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2000~2005년을 제외한 시기에 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영자 및 임금근로자 가구를 막론하고 비교가 되는 과거 시점에 비해 최근의 빈곤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최근 우리나라 전반에서 빈곤 취약성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차항의 계수는 비교가 되는 두 시점 간 자영자의 빈곤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2000~2005년 기간을 제외하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교 연도의 자영 빈곤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추정 결과를 통해 분석대상의 개인 및 가구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자영자의 빈곤 가능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정 정도 높은 특징과 함께 우리나라 전반에 빈곤 취약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 년 동안의 자영자 가구와 임금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와 빈곤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를 기점으로 자영자 가구의 소득창출력이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약화됨으로써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저학력-중고령자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자영자 가구 및 임금근로자 가구 모두에서 최근 들어 빈곤위험에 취약해지는 특징과 함께 저소득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영자 가구 및 임금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가구경

제·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소득격차와 빈곤 가능성을 추정한 결과, 자영자 가구는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격차가 최근으로 갈수록 크게 확대되고 있고 빈곤 가능성 또한 높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결국 기술집약적 경제(skill intensive economy)하에서의 자영자의 저숙련 문제는 저소득(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최근 자영업 부문의 경쟁과열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의 자영업 노동시장을 둘러싼 내·외부적 환경변화는 이러한 빈곤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인구고령화 현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임금노동시장에서 자영업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중고령자들이 확대될 것을 감안하면 이 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는 저숙련-중고령화-빈곤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에 자영업 노동시장의 내부적 구조개선과 열악한 노동시장 성과에 의한 빈곤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장을 위한 노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고령인구의 일자리 정책은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한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우리보다 일찍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본격적인 고령화사회 진입 이전에 각종 고령화 정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방식의 후생연금을 정비했으며, 65세 정년 의무화 및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했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노동시장에서의 정년연장제도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벌칙 조항까지를 두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인구는 임금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을 겪고 조기에 퇴직하거나 밀려나는 베이비붐 세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고령자 고용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한편 일본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5만~7만 엔(약 65만~90만 원)의 지원금과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계속고용 정착촉진조성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인센티브제도가 1인 고용 시 첫 6개월 36만 원, 다음 6개월에 18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큰 금액이다.

둘째, 자영자 가구의 저소득·빈곤화 문제에 대한 소득보장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영업자는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자격과 급여가 —그것이 자발적이든 혹은 비자발적이든—포괄성과 충분성 모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최소 1년간 정부가 고시한 5단계 기준보수(150만~230만 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비자발적 폐업 시 기준보수의 50%를 가입 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그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업자들을 포괄함으로써 이들에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다. 그러나 여전히 1년 이상이라는 가입 기간 규정과 보험료 3회 이상 체납 시 수급 박탈 등의 엄격한 규정은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는 영세자영업의 제도 가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셋째, 정부의 자영업 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구체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간 5·31대책으로 불리는 2005년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인프라 구축,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강화, 직업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지역 중심의 지원체제 확립 등을 골자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및 자영자 가구의 저속련-중고령화 저소득의 연결고리는 쉽게 단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11)의 지적대로 2009년 이후 자영업자 지원 예산의 50% 이상이 산업금융 지원 및 산업기술 지원(R&D)에 집중되었고, 2011년 4천억 원을 투입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일반을 대상으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사업 목적이 한계자영업자의 생계수단 연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기존의 5인 미만 생활형 자영업자(음식, 도소매업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영진단 및 사업타당성, 창업 준비 등의 경영컨설팅 지원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지원에 대한 다양한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은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촉진 및 개인



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보험제도의 가입을 독려하고 홍보하는 전략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국세청(2010). 2010년 6월 23일자 보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1).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경제현안분석』 제65호.
- 금재호·조준모(2000).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3(특별호): 81~107.
- 금재호·류재우·전병유·최강식(2003).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2011).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노동리뷰』 80: 61~75.
- 김우영(2000).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3(특별호): 55~80.
- \_\_\_\_\_(2001).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직업만족도 비교분석」. 『중소기업연구』 23(3): 29~54.
- 박희석(2011). 「서울시 자영업: 특성과 정책적 지원 방향」. 『SDI정책리포트』 제82호. 서울시정개발원.
- 반정호(2011). 「자영자 가구의 소득실태와 변화: 1990~2010년」. 『노동리뷰』 79: 19~32.
-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1): 161~182.
- \_\_\_\_\_(2011). 「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노동정책연구』 11(3): 53~80.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희숙(2012).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KDI포커스』 제14호.
- 이병훈·신재열(2011). 「자영자의 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92:

247~274.

이병희(2012). 「자영업 구조조정과 임금근로 전환의 노동시장 성과」. 『사회보장연구』 28 (1): 191~215.

이승렬 · 김종일 · 박찬임 · 이덕제 · 홍민기(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II』. 한국노동연구원.

최경수(2010). 「저소득층 소득 증가 부진의 원인 분석」. 『KDI정책포럼』 제227호. 한국일보. 2011년 12월 5일자 보도자료.

Blanchflower, D., and A. Oswald(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26~60.

Chen, M. et al.(2005). “The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05: Women, work and poverty, 2005.” UNIFEM, UN: New York.

Crettaz, E., and G. Bonoli(2010). “Why are Some Workers Poor?: The mechanisms that produce working poverty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Reconciling Work and Welfare in Europe*. Working Paper. REC-WP 12/2010.

Eurostat(2005). “In-Work Poverty, New Commonly Agreed Indicators at the EU level.” *Statistics in Focus* 5. Luxembourg: European Communities.

Evans, D. S., and B. Jovanovic(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808~827.

Evans, D. S., and L. Leighton(1989). “Some Empirical Aspect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79: 519~535.

Hamilton, B. H.(2000). “Does Entrepreneurship Pa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turns of Self-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 (3): 604~631.

Holtz-Eakin, D., Joulfaian, D., and H. Rosen(1994). “Sticking It Out: Entrepreneurial Survival and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 53~75.

Holtz-Eakin, D., Rosen, H. S., and R. W. Weathers(2000). “Horatio Alger Meets

- the Mobility Tables.” *Small Business Economics* 14: 243~274.
- HRSDC(2006). “When Working is not Enough to Escape Poverty: An analysis of Canada's working poor.” Human Resource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Working paper No. SP-630-06-06E.
- Jovanovic, B.(1982). “Selection and the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Econometric Society* 50 (3): 649~670.
- Jütting, J., Perlevliet, J., and T. Xenigiani(2008). “Informal Employment Reloaded.”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39 (2): 28~37.
- Lazear, P., and L. Moore(1984). “Incentives, Productivity, and Labor Contrac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9 (2): 275~296.
- Lofstrom, M.(2009). “Does Self-Employment Increase the Economic Well-Being of Low-Skilled Workers?” IZA Discussion Paper No. 4539. Forschungsinstitut zur Zukunft der Arbeit. University.
- Maloney, W. F.(2004). “Informality Revisited.” *World Development* 32 (7): 1159~1178.
- OECD(2009). *Promoting Pro-Poor Growth: Employment*. OECD.
- Perry, E., William, F., and S. Omar(2007). “Informality: Exit and Exclusion.” World Bank.
- Parker, S. C.(1997). “The Distribution of Self-Employment Income in the UK: 1976~1991.” *Economic Journal* 107: 455~466.
- Robson, T.(1997). “The Relative Earnings from Self and Paid Employment: A time-series analysis for the UK.”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4 (5): 502~518.
- Taiwo, O.(2011). “A Model of Self-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Brookings Institute, Washington D.C.
- Van Praag, C., and J. Cramer(2001). “The Roots of Entrepreneurship and Labor Demand: Individual ability and low risk aversion.” *Economica* 269: 45~62.

## A Study on the Income Variation and the Poverty of Self-employed Households : Based on the Comparison of Paid Worker Households

Jung-Ho Ban

An empirical analysis for the study was provided to look into the income disparity and the poverty risk of self-employed and paid workers between the year of 1990 and 2010. The result was presented that the income creation of self-employed households was diminished compare to those of paid worker households around the time of IMF crisis. Moreover, the income disparity has been expanded especially on the low-educated and the aged class. A conclusion, estimating the features of an individual, a household economy and a labor-market, was drew that the income disparity and the poverty probability of the self-employed households was increased more than the those of the paid worker households. It is imperative, with the expansion of population aging and labor flexibility, to consider a way of discontinuing the links among the low-skilled-aging population-poverty of the self-employed, which turns up with the combinations of the reality of making a choice to be a self-employed, economic recession, excessive competition and exacerbated profitability.

Keyword : self-employed households, paid worker households, Income disparity, poverty risk